

## ●한미FTA 강행

## ●국민연금 · 사학법 개악

## ●비정규직 마구잡이 해고

## ●‘조폭’ 재벌의 무법천지 난동

# 이것이 노무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최근 4·25 재보선 결과는 주류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환멸을 보여 줬다. 특히 한나라당의 ‘재보선 필승 신화’가 무너졌다.

물론 돈 공천, 후보 매수 등 비리 사건이 선거 직전에 터진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지만, 사실 한나라당의 부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조차 비아냥거렸듯이 한나라당은 “물밑에 [부패한] 몸통과 뿌리가 그대로 있는” 정당이기에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런 ‘차떼기’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50퍼센트를 넘었던 것은 순전히 노무현의 배신과 개혁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 덕분이었다. “이념적 보수성으로 본 (순수) 한나라당 지지도는 20퍼센트 안팎”에 불과했던 것이다.(홍형식 한길리서치 연구소장)

노무현의 열우당 탈당 속에 열우당이 후보도 거의 못낸 4·25 재보선은 소위 ‘노무현 없는 선거’였고, 여기서 한나라당의 거

품은 다 빠져버렸다.

더구나 한미FTA 추진, 국민연금 개악, 사학법 개악 등에서 노무현과 ‘찰떡 공조’중인 한나라당은 ‘반노무현 전선’을 형성할 수가 없었다.

한나라당 부진의 공백을 충당해서는 국민중심당 심대평이 차지했지만, 국민중심당의 전국적 지지율은 고작 1퍼센트 수준이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비리 전력이 있는 김홍업을 공천해 당선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으로 보인다.

김홍업은 김대중 ‘혈통’을 내세웠는데도 49.7퍼센트의 지지에 그쳤다. 2004년 총선 때 한화갑이 57.5퍼센트의 지지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주류 언론의 분석과 달리 지역주의 약화로 봐야 한다.

‘재보선 필패당’인 열우당은 후보도 내지 않고 이념상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심대평과 비리전력자 김홍업을 지원했다. 그 래 놓고 “범여권의 승리”라며 자

축하는 모습은 어처구니없는 꼴 불견이다.

반면, 주류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과 환멸 속에 무소속 후보가 무려 23명이나 당선됐다.

또, 주류 언론은 완전히 무시했지만 민주노동당도 평균 16.58퍼센트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것을 “한미FTA 타결 이후 민주노동당이 … 위상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 징후”라고 분석했다.

### 몸부림

주류 정치권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열우당 주류가 추진하는 통합신당은 계속 미래가 어두울 것이다. 노무현의 한미FTA 추진, 사학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을 돕는 이 자들이 정치적 떡고물을 챙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소수파인 김근태와 천정배의

‘개혁 연대’는 한미FTA 반대를 표방했지만 한미FTA를 지지하는 열우당 주류나 민주당 등과의 “폭넓은 대연합”도 추진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노무현 전선’을 되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6월 한미FTA 체결, 7월 레바논 파병까지 노무현 정부와 ‘찰떡 공조’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박근혜의 아귀다툼과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

주류 정치권 전반에 대한 환멸 속에 커다란 정치적 공백이 형성되는 지금,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이 기회를 부여잡기 위해 더 적극적인 도전과 모험에 나서야 한다. 엉뚱한 자들이 어부지리를 얻기 전에 노무현·열우당·한나라당의 한미FTA 추진 등 개악에 맞선 대중 투쟁 건설과 함께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통한 정치·선거 대안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 3면의 관련 기사를 보시오



### 메이데이 특집

- 1987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 한미FTA는  
반노동자 협정이다

-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위원회

김명희 정책국장 인터뷰

- 울산과학대 김순자 지부장 인터뷰

- 비정규직 확대 · 양산을 저지하라

5,6,7,12면



베네수엘라 반자본주의자에게 듣는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4면

한미FTA와  
진보진영 선거연합

3면

존 몰리뉴 칼럼  
-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9면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현장 밀착 취재

11면

www.  
counterfire.or.kr

<맞불> 온라인 기사

소말리아  
-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결과  
부시가 부추긴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침략  
은 끔찍한 참상을 낳고 있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인용해도 될까요?”

“조승희가 카메라에 총을 겨누고 있는 섬뜩한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 조지 부시의 외교정책이 가져온 파괴적인 실상과 부시라는 사람, 그리고 그가 벌인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전쟁을 떠올렸다. …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미국은 ‘국제 무대의 조승희’다.”

– 전 미국 외교관 존 브라운

“국회의원 3명에게 2백만 원씩 매달 6백만 원 쓰고 있고 열린우리당 한 사람, 한나라당 의원 2명에게 쓰고 있다. 그 사람들이 맨 입에 하겠나. … 골프 접대하고 북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마비도 집어주고 다 했다.”

– 의료법 로비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장동익

“[썬앤문 회장 문병욱이] 돈뭉치 2개가 든 큰 쇼핑백을 노[무현] 후보에게 직접 건넸다.”

– 최근 공개된 2003년  
수사 당시 썬앤문 부회장  
김성래의 증언

“우리들은 경호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한 산으로 끌려갔다. … 김 회장이 ‘내 아들이 눈을 맞았으니 너도 눈을 맞으라’며 눈을 계속 때렸다. … 경호원들의 옷 사이로 생선회칼이 보여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공포에 떨었다”

– 김승연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

“이제 더 이상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씨를 자유 진영의 챔피언으로 보아선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한나라당이란 썩은 새끼줄을 붙들고 인수봉을 오르는 대책 없는 자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 조갑제의 한탄

# 3불정책 폐지는 부유층의 탐욕을 위한 것

하재근(‘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3불정책은 본고사 · 고교등급제 · 기여입학제 금지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곧 간판이고 평생 가는 신분을 의미한다.

기여입학은 그 신분을 돈 주고 사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일류 대학들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신분을 ‘구매’할 자유를 주자는 말이 된다.

고교등급제 금지는 고등학교의 서열을 공식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고교등급제를 통해 고교간 서열이 공식화하면 고교평준화는 자연스럽게 무력화된다. 그럴 때 상위 서열을 독차지할 학교들은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다.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일부 강남 고등학교들이다.

일류대가 지방민과 가난한 국민들에게 그림의 떡인 것처럼, 일류 고등학교도 어차피 다수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고교등급제를 하자는 것은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특혜를 줘서 더 쉽게 일류대를 가게 만들자는 얘기다.

본고사를 보게 하면 각 대학은 서열별로 문제를 낼 것이다. 서울대는 1류 서열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낼 것이다. 그 문제는 당연히 공교육 교육과정엔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 된다.

그리 되면 아이들은 지금보다 사교육이 더 필요해진다. 일류대의 고난이도 입시문제를 통과해 일류 간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비싼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일 것이다.

결국 3불정책 폐지는 대다수 국민의 자식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평범한 집 자식은 지배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노예이고, 돈 있는 집 자식은 그 돈으로 신분을 사서 평생 다른 국민 자식들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일류대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것을 백주에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안중에 국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뜻이다.

일류대들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만 노예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대들을 비롯해 한국의 대다수 대학들을 모두 ‘노예의 학교’로 취급하는 것이다. 3불정책을 폐기하건 말건 일반 대학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지방대가 고교등급제를 시행한다고 특목고 학생들이 지방대를 지원할까? 지방대가 본고사를 본다고 강남 자녀가 지방대를 지원할까? 3불정책은 일반 대학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

3불정책이 규제하는 것은 오직 일류대, 그리고 일류대를 독점하려는 부유층의 탐욕뿐이다. 고교등급제를 통해 귀족 고등학교를 만들고, 본고사를 통해 귀족 사교육 코스를 만들어 일류대를 독점하려는 부유층의 탐욕, 귀족 학교가 되려는 일류대의 탐욕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익을 명분으로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수 국민은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말이다.

### 기여입학제

참여정부도 명시적으로는 3불정책을 지킨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3불정책은 허물어진 지 오래다. 서울 일류대들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시행해도 정부는 처벌하지 않는다.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본고사를 보려 해도 말로만 옥신각신할 뿐 처벌하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이 자유화 일변도이기 때문이다. 자유화 기조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규제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가 탈규제인 한 3불정책을 지킨다는 것은 말 놀음일 뿐이다. 국민만 놀아나고 있다.

3월 27일에 열린 3불정책 폐지 반대 기자회견

3불정책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3불정책을 지킨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단지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것만을 막을 수 있을 뿐이다. 그 ‘지금’이란 무엇인가? 바로 ‘입시경쟁’이다.

입시경쟁은 대학서열체제 때문에 생긴다. 일류대들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보다 대학서열체제를 더 심화시켜 자신들만 저 하늘 위로 날아가겠다는 말이다. 그걸 막는다 해도 대학서열체제 자체는 변하지 않고, 당연히 입시경쟁 구조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민은 언론이 연일 대서특필하는 3불정책 논란에 휩싸여선 안 된다. 3불정책이 깨지면 국민이 지하 2층에 내동댕이쳐지지만, 3불정책이 지켜져도 지하에 갇혀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이 지금 요구해야 할 것은 입시경쟁의 폐지다. 그것은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할 때 가능한 일이다. 대학서열체제 혁파가 두려운가? 대학서열체제 혁파로 손해를 보는 것은 3불정책 폐지로 이익을 보는 극소수, 즉 일류대와 그 일류대를 독점하려는 대한민국 상위 폭지점 집단뿐이다. 그 외엔 모든 국민에게 이익, 다시 말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두려움을 버리고 입시경쟁 폐지를 요구할 때다.

### 한화 회장 김승연 폭력 사건

## 재벌의 ‘조폭’식 축재 행태를 반영한 사건

한화 회장 김승연의 ‘북창동 습격 사건’은 마치 한 편의 3류 조폭 영화 같다. 3월 8일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유흥주점 종업원들은 “내가 누군지 알고 때리느냐”는 김승연 아들의 말을 무시했다가 피의 보복을 당했다.

김승연은 쇠파이프 · 전기봉 · 회칼로 무장한 17명의 경호원, 용역강패, 조폭을 데리고 보복에 나섰다. 검은 장갑을 낀 김승연은 ‘총’까지 들고 “북창동을 다 없애 버리겠다”며 습격을 진두지휘했다고 한다. 폭행당해 만신창이가 된 종업원들에게 김승연은 “남자답게 없던 일로 하자”며 1백만 원을 던지고 떠났다는 것이다.

한화 고문인 전 경찰청장 최기문이 경찰에 전화해 압력을 넣었고 경찰과 검찰은 한 달이 넘도록 이 사건을 덮어 놓고 있었다. 권력과 재벌의 더러운 유착이 있었던 것이다.

한화의 성장 과정은 부패와 폭력으로 뒤섞여 있다. 한화가 인수합병을 통해 10여 년 만에 자산 규모를 수십 배나 불리며 10대 그룹으로 성장한 것은 이 덕분이었다. 김승연은 1993년에 외화 밀반출로 구속된 바 있고, 김대중 정부와 유착해 대한생명을 헐값 인수했다.

용역강패를 통한 노동자 탄압도 김승연의 주특기였다. 한화프라자CC 경기보조

원과 한화오토론 노동자들이 그 피해자였다. 이 버릇이 이번에도 나온 것이다.

비난 여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김승연은 뻔뻔스럽게 아들을 몰래 출국시키고 “피곤하다”며 두 차례나 소환을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경찰에 출석했다.

한화 관계자는 “경찰이 대기업 총수에게 너무 함부로 한다”며 협박하고 나섰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한화는 노무현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대표적 기업 중 하나다.

김승연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도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하루 전에 미리 알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는 “한화가 노무현 당선 축하금으로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은 불법 대선자금 전달 혐의 기업주들을 끔찍이 챙겨 왔다. 최근에도 노무현은 공금횡령과 조세포탈 유죄까지 받은 창신섬유 회장 강금원과 골프를 쳤다.

재벌들은 검은 돈을 이용해 권력과 유착하고 용역강패를 동원해 노동자를 짓밟는 등 ‘조폭’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여왔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것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노무현은 비리 재벌들을 수시로 사면하며 ‘유전무죄’를 입증해 왔다. 불법을 자행한 재벌 총수 이건희, 정몽구, 박용성 등은 모두 처벌받지 않았다. 덕분에 재벌들은 법도 무시하고 김승연처럼 ‘무법천지’로 날뛰고 있는 것이다.

당장 김승연을 구속 · 처벌하고 김승연 비호 세력도 밝혀내서 처벌하라.

전지윤



#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

김인식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위원장,  
〈맞불〉발행인

열우당 붕괴가 정치적 공백 상태를 낳고 있다. 〈맞불〉은 지난해 말부터 이 공백을 메울 광범한 진보진영 결집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을 바탕으로 선거대안, 즉 반전·반신자유주의·반주류정치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한편, 최근 심상정 의원은 “광범하게 형성된 한미FTA 전선의 성과를 진보진영 재편으로 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반대 운동에 근거해 “진보진영 재편”을 해야 한다는 제안은 적극 지지할 만하다. 첫째, 심 의원이 주장했듯이, “단지 상층 정치세력의 정치공학적 결합이 아니라 한미FTA에 반대하는 광범한 실천 속에서 나오는 아래로부터 재편”이라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한미FTA 반대 운동은 커다란 진보를 이룩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대중의 반신자유주의 정서에 정치적 표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연합해 한미FTA 찬성 여론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도 한미FTA 반대 여론은 30퍼센트를 넘는다. 한미FTA 협상문이 공개될 경우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특정 정세 속에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단일쟁점 연합체 — 고전적 공동전선 — 가 대중의 참가와 행동을 북돋는 데서 결정적임을 입증한다. 이런 운동의 장점은 비교적 단순한 쟁점을 둘러싸고 공동 활동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대중 행동을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총체적 강령은 다를지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의 제1라운드에 실제 참가할 수 있고 자신들이 내딛은 보폭만큼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2005년 프랑스에서 승리한 유럽헌법 반대 운동과 2004년 독일에서 슈뢰더 정부를 뒤흔든 복지 ‘개혁’ 반대 연합체의 특징이었다.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도 똑같은 원리에 근거해 있다. 프랑스는 두고볼 일이지만, 독일과 영국에서는 각각 ‘좌파’(Die Linke)와 리스펙트라는 새로운 좌파 정당들이 탄생했다.

그러므로 진보진영 선거연합이 한미FTA 반대 운동 같은 대중운동 속에서 등장해 그 운동과 관련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소중한 미덕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보다 더 넓은 스펙트럼의 세력들에 기반할 수 있을 것이고, 부르주아 ‘개혁’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대안을 대중운동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3백 개가 넘는 매우 다양한 단체들 — 민주노동당과 각종 좌파 단체들, 사

회운동적 NGO들, 학생 단체들, 종교 단체들, 소비자 단체들 등 — 이 포함돼 있는 ‘범국본’을 민주노동당과 민중운동진영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신자유주의 모델, 빈부격차 심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보건의료와 공공서비스의 악화 등에 대한 엄청난 반감에 근거해 있다. 이 운동이 광범하면서도 동시에 급진적일 수 있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 선거연합이 한미FTA 반대 운동으로부터 출발하더라도 그것이 곧 온건화 압력 수용을 뜻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천정배

그런데, 한미FTA를 반대하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들도 선거연합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발의해 결성한 ‘한미FTA 졸속 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에는 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밥 숟가락만 올려놓고’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런 자들이 진보진영 선거연합에 참여할 리 만무하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진보진영의 선거연합이 필요하다

문제는 단식 농성까지 해 가며 한미FTA를 반대했던 천정배·임종인·김근태 등에 대한 태도일 것이다. 민주노동당 일각(과 ‘미래구상’의 ‘좌파’)에서는 이들과 민주노동당의 연합을 희망한다. 당 안에는 이런 연합에 반대하는 분위기도 상당하다. 진보진영 선거연합에 대해 당 지도부가 보이는 신중하다 못해 답답하기까지 한 행보도 이런 양극단이 가하는 압력 때문이다.

한때 열우당에 있다 지금은 탈당해 운동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또, 민주노동당과 이런 자들의 연합을 강력히 희망하는 ‘미래구상’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노동계급의 정치적 대표체와 지배계급의 정치적 대표체 간의 연합은 체제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힘을 갈아먹을 뿐이므로 반자본주의자들은 이런 연합을 반대한다.

그러나 먼저, ‘미래구상’은 열우당이 아니다. 그들이 범여권 ‘개혁파’의 결집을 희망할지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예컨대, 반전 연합체 안에는 ‘다함께’처럼 이라크 저항세력의 무장 저항을 지지하는 쪽과 그것을 지지하기를 꺼리는 평화주의 세력이 공존한다. 이라크 저항세력의 무장 저항에 대한 태도가 공동행동의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꼭 마

찬가지로, 천정배 등 한미FTA에 반대하는 열우당 이탈파에 대한 태도가 선거연합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그렇다면 한미FTA에 반대하는 열우당 이탈파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천정배 등의 한미FTA 반대를 기회주의라고 비판하며 그 진정성을 의심한다. 일리 있는 비판이자 의심이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실제 일선에서 실천을 하면 우리 스스로도 변화하고 상대도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봐야지 기존 주장만 갖고 기계적으로 나누려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천정배 등이 향후 사태 전개 과정에서 어느 방향을 향하게 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선거연합을 위해 천정배 등에 결코 무비판적이서도 안 되지만, ‘미래구상’의 구상에 대한 의심 때문에 선거연합 논의 자체를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것도 잘못이다. 마치 프랑스에서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 등 혁명적 좌파들이 사회당에 대한 공산당의 모호한 태도(사회당-공산당 연립정부 가능성)를 의심해 선거연합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바람에 결국 좌파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경험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열우당이 아닌 정치 대안을 원하는 사람들은 순수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자신들 앞에 펼쳐진 정치 지형을 재편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소극적

사실, 운동이 대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정치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좌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는 선거를 뜻한다. 선거운동은 좌파 활동가들이 광범한 대중과 체계적으로 관계 맺을 공간이자 기회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운동은 정치적 주장을 제기하고 사회적 자유주의 정부나 부르주아 ‘개혁’ 정부의 배신에 도전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복지 삭감 프로그램인 ‘하르츠Ⅳ’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이 집권 사회민주당(SPD)을 분열시켰고 이 과정에서 새 좌파 정당인 ‘좌파’가 막 탄생했다.

영국에서는 전쟁과 반전 운동 때문에 블레어의 노동당이 아닌 선거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반전·반제 운동은 그 대안으로 리스펙트를 건설했다. 브라질에서 ‘사회주의와 자유당’(P-SoL)은 좀더 분명한 반자본주의 방향으로 새로 급진화하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에서는 운동이 가장 멀리 나아가 혁명적 정치의 문제가 의제에 올라 있다.

운동들이 단순히 새 정치 구조물 건설로 환원될 수는 없겠지만, 열려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정치적 둔감함과 만만디는 지금처럼 정치적 역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스스로 무용지물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고 차베스의 볼리바르식 혁명과 21세기 사회주의는 한국의 많은 좌파 활동가들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베스를 지지하지만 극소수는 차베스가 독재자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비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차베스가 독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8차례 선거를 치렀고, 거듭거듭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차베스가 독재자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차베스에게 조금은 권위적인 면이 있고, 때때로 혼자서 이런저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가 차베스 혼자 힘으로 건설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차베스는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민중이야말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진정한 주체입니다.

또, 베네수엘라 민중은 차베스의 정치에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차베스를 중심으로 지지합니다. 만약 차베스가 없었다면 혁명적 과정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2년 우익 쿠데타는 혁명적 과정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차베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금 차베스가 있고, 그는 민중이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민중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차베스도 정부도 아니라 민중 자신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민중 중심성이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베스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전 세계 어느 대통령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베스가 군부를 앞세워 베네수엘라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북한의 선군정치 비슷하다는 거죠. 차베스와 군부의 실제 관계는 어떠한니까?**

차베스가 군인 출신이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만드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군부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변화하는 민중을 봅니다.

베네수엘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 보면, 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나

## 베네수엘라 활동가 인터뷰

#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중입니다”

[편집자] 마이살룬 케이지는 베네수엘라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운동 단체인 ‘우리의 아메리카를 위한 계획 — 4월 13일 운동’의 활동가이다. <맛불> 기자 조명훈이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에 참가한 마이살룬을 만나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 물었다.

라·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에, 또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군대나 차베스 때문이 아니라 모두 민중 자신 때문입니다. 차베스는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애초에 차베스는 ‘까우디요[소영웅주의적 포퓰리스트 지도자를 뜻하는 스페인어편집자]’, 즉 모든 결정을 일일이 내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례로, 사람들은 ‘안녕, 대통령!’ 프로그램에 나와 차베스에게 직접 정부 정책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차베스가 법률을 제정하려 할 때, 사람들이 “이 법률은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제정해선 안 된다. 이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고쳐야 한다” 하고 비판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때때로 조금 권위적일지라도 차베스는 민중의 말을 경청합니다.



제5차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에서 연설하는 차베스

**‘볼리바르주의 서클’과 ‘주민자치평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볼리바르주의 서클은 더는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혁명적 과정을 수호한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으나 이후 부패가 엄청나게 만연했습니다. 주민자치평의회는 매우 훌륭한 시도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토지나 조직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법이 있더라도 민중은 그 법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민중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평의회는 베네수엘라의 관료제와 국가 기구를 극복하고 민중 자신이 참여해 국가의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것은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라라 주(州)의 카로라는 주민자치평의회가 최초로 조직된 곳으로 지역의 모든 자원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잘 보여 줍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아직 유일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아직 모든 주의 모든 주민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베스를 중심으로 지지하지만, 차베스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민중이 해야 합니다. 차베스와 민중 사이에는 권력을 민중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 집단이 있습니다. 민중과 권력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차베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관료주의를 걱정합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21세기 사회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사회주의를 구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안 체제 사상, 민중권력 사상, 변화하겠다는 의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지고 우리는 관료주의에 맞서 싸웁니다.

사회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와 제국주의 체제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이윤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체제가 베네수엘라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난 8년 간 이것을 부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전에 민중은 정치인들이 늘 부패하기 마련이고, 정치에는 늘 관료주의가 따라 붙기 마련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에 맞서 싸울 수 있고 또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혁명적 과정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희망·저항·참여·행동·변화의 과정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기 나라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느낍니다. 단지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지구 전체가 우리의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중입니다. 민중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중은 자신을 교육하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들의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 주다

“난생 처음 노동자들에게 굴복했다.” 1987년 경원제지 회장이 한 이 말은 그 해 남한 자본가 계급 전체의 심정을 반영했다.

1987년 전국의 노동자들이 들불처럼 일어섰다. 7월~9월 석달 동안 3천3백41건의 쟁의가 벌어졌다. 이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전체 노동쟁의 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것이다. 대투쟁이 일어난 후 1년 안에 노조가 4천 개나 새로 만들어졌고 노동자 약 70만 명이 노조에 새로 가입했다.

당시 남한 경제는 이른바 ‘3저 호황’을 누렸다. 경제 성장률이 1986년에는 12.5퍼센트를 넘었다. 그러나 이런 초고속 성장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피의 결과였다.

박정희 정권 이래 군부 독재는 압축 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쥐어짠다. 1987년 대투쟁 직전에도 전체 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한국노총의 4인 가족 최저생계비와 비교했을 때 62.6퍼센트밖에 안 됐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3.7시간에 달했고 한 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14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군부 독재는 자본가들의 ‘작업장 독재’의 보루였다. 노동자들은 거의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었고 군대식 노동규율이 난무했다. 예를 들어 현대그룹 노동현장을 묘사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뒷머리가 상의 칼라만 살짝 덮여도 정문을 지키는 경비대의 바리깡이 사정없이 지나갔고 작업 지시는 곧 명령이었으며 일과는 복종의 연속이었다.”

1987년 노동자들의 대투쟁은 이런 군부 독재를 끝장내고 ‘작업장 독재’에 타격을 입힌 위대한 반란이었다. 6월 민주화 투쟁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했다.

## 6월 민주화 항쟁

6월 민주화 투쟁에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한 것은 아니었다. 조직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통제하는 한국노총은 전두환의 군사 독재 연장 선언인 ‘4·13 호헌 조치’를 찬양했다. 한국노총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몇몇 중소 작업장에서 민주노조 운동이 있었지만 이조차 1985년 들어 전두환이 억압을 다시 강화하자 위축됐다. 운동의 정치적 상징구실을 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발기인 2천1백91명 가운데 39명만이 노동자대표들이었다.

그러나 6월 민주화 항쟁이 학생과 중산층의 투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거리에서 정치적 지도는 좌파 학생·청년이 제 공했지만, 시위 참가자 면에서 노동자들은 대거 개별적으로 이 투쟁에 참가했다.

성남시가 작성한 <6.20~6.21 가두시위 종합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에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은 “근로자 34명, 대학생 8명, 고교생 4명, 재수생 4명, 상업 9명, 막노동자 6명, 무직 11명, 기타 4명”이었다. 즉, 막노동자와 실업자를 포함하면 노동계급이 63.7퍼센트를 차지한 것

이다.

이런 현상은 공장 밀집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사무직 노동자들도 점심 시간이나 심지어 근무시간에도 관리자에게 핑계를 대고 시위에 합류하곤 했다.

날이 갈수록 노동자들의 참가가 점점 두드러지면서 투쟁이 심화되자 정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는 결국 6·29 선언을 발표해야 했다. 최장집 교수는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자유화 조처는 잘못하면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을] 우려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지배자들의 바람과 달리 정치적 민주화 운동에 멈추지 않았다. 6월 민주화 항쟁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거리에서 벌인 투쟁에 밀려 군사 독재 정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봤다. 노동자들의 생각은 더 나아갔다. 그렇다면 작업장에서는?

전 통일노조 진영규 위원장은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6월 민주화 투쟁] 집회가 끝나면 주로 양산박에 모였어요. 거기서 술 마시면서 영웅담을 늘어놓았죠.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도 조합 한번 뒤집자, 한번 일어나야 한다 [하면서] 민주노조를 이야기했죠.”

6월의 정치투쟁이 7월에 시작된 노동자들의 대반란에 자신감을 준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대중파업》에서 지적했듯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이 서로 같

1987년 8월 18일 울산 시내로 진출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마들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는 오늘날 노동자들이 한미FTA 반대 운동이나 반전 운동 같은 정치적 투쟁에 참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6·29 선언 일주일 뒤인 7월 5일 현대 엔진 노동자 1백여 명이 울산 시내 디스코텍에 모여 기습적으로 노조를 결성했다. 이에 고무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없다”던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의 눈에 진짜 흠을 뿌리며 일어섰다. 이것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반란을 알리는 봉화였다.

울산발 파업 열풍은 주요 중공업 중심지인 부산·창원·마산으로 확산됐다. 8월 중순에는 파업 열풍이 경공업 지대인 경인 지역과 전라도로 번져,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거의 어디서나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 불법 파업

한 학자는 당시 “수동성과 침묵”이 특징이던 대기업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축으로 나선 것을 “놀라운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수적인’ 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하청 회사 등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공간을 열어 주었다.

또, 중공업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부문을 뛰어넘어 운수·사무·서비스 등

다른 업종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했다.

투쟁은 자생적이었다. 임영일 전 영남 노동운동연구소 소장은 “준비된 파업은 거의 없었으며 활동가들에 의해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됐던 몇 안 되는 사례들에서도 대중의 진출 속도와 규모, 격렬성에 비춰 볼 때 그 준비는 이미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됐다”고 말했다.

번듯한 노조 하나 없었지만 노동자들은 “회사 내에 있는 동문화, 향우회, 그리고 산악반 등의 조직”까지 활용해 스스로 동원했다. 노동자들이 자기해방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할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다.

노동자들은 협상을 위해 합법적 절차를 지키며 기다리지 않았다. 파업의 94.1퍼센트가 ‘불법 파업’이었다. 거의 모든 작업장에서 ‘일단 파업에 들어가고 나중에 협상한다’는 식이었다. 그 덕분에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극대화했다.

억압이 심했던 만큼 노동자들의 요구도 다양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차별적인 임금체계 철폐, 두발·복장 규제 철폐, 강제적인 아침체조 중단, 점심식사 개선, 남녀평등 등을 요구했다.

노조 지도부가 어용이거나 노조 조직이 없었으므로 현장노동자들이 주도력을 발휘했다. 현장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배신하는 지도부를 현장에서 즉시 소환·교체했다. 현장노동자들의 기세는 노조 지도부조차 놀라게 해 “그들은 나의 피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고 두려워할 정도였다.

자본가들은 경악했다. “계급 혁명”의 공포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자본가들은 정부에 매달렸지만 6월 항쟁에 이어 연타를 얻어맞은 정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8월 중순경 전열을 가다듬고 대대적 탄압에 나서기 시작했다. 탄압은 자생적 투쟁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제대로 이끌 진정한 정치조직이 없었다는 한계를 간파한 것이다. 김영삼·김대중이 이끄는 부르주아 야당은 “파업 자제”를 요구했고 국민운동본부는 계급 연합 때문에 노동자 대투쟁을 사실상 방치했다.

투쟁은 사그라들었지만 노동자 대투쟁이 한국 사회에 남긴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노동자 대투쟁 때문에 보수 반동 세력은 민주화 흐름을 뒤집을 수 없었다. 1960년 4·19 혁명과 1980년 민주화 운동이 군부의 반동 쿠데타로 좌절된 것과 는 달랐던 것이다.

대투쟁 과정에서 생겨난 연대 의식으로 노동자들은 기업간·지역간 연대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건설의 기초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무엇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언뜻 보기에 ‘보수적’이고 ‘실리’밖에 모르는 듯하던 평범한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체제를 마비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맞선 저항을 건설하려는 후예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다.

한규한



GM대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현장투쟁위원회’  
김명희 정책국장 인터뷰

“비정규직의 투쟁과  
정규직의 연대로 승리했습니다”



[편집자] 올해 초 GM대우 부평공장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도 없는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고,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를 끌어내며 사측의 해고와 공격을 일부 막아냈다. 곳곳에서 비정규직 해고와 공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나이갈 길을 보여 준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GM대우 사내하청 DYT 해고노동자 김명희 동지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다.

GM대우차 비정규직 파업이 벌어지게 된  
배경과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1월 부평공장에서 I/P공정을 맡고 있는 DYT에서 외주화(모듈화) 계획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40~50대 아주머니들이었지만 외주화되면 쟁탈 것이라는 불안감에 다 그동안 관리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해 온 분노가 쌓일 대로 쌓여 있었습니니다. 먼저 야간조 35명 전원이 ‘작업 거부’(파업)에 돌입했어요. 주간조도 파업에 동참해 낮에도 2시간 동안 공장이 멈춰 섰죠. GM대우차 부평공장 최초의 비정규직 파업이었죠. 그 후 공장 안에서 30여 명이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20일 동안 농성했습니다. 스피드파워월드[하청업체] 노동자들도 DYT 농성 기간에 해고에 맞서 전업을 거부했습니다. 그 와중에 관리자들이 직원을 폭행해 놓고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해고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분노한 스피드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에 돌입했고 3월까지 투쟁은 최고조를 이뤘습니다. 그러자 GM대우 측은 DYT 업체를 폐업시키고 용역강제들을 시켜 농성 참가자들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현장 활동가들의 엄호 속에, 안에서는 스피드 노동자들이 투쟁을 계속했고 밖에서는 쫓겨난 DYT 노동자들과 GM대우 창원·기아·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GM대우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투쟁이 다른 업체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GM대우는 스피드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켰습니다. 노조도 없는 상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궈낸 값진 승리였죠. 다른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현장 활동가들이 연대해서 함께 투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드 투쟁은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DYT 노동자들은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노동자들도 함께 투쟁하는데 투쟁 대오가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연대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DYT 파업 초기에 정규직 현장 활동가들도 많이 우왕좌왕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결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투쟁이 2~3개월 지속되면서 정규직 동지들 내부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엄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됐고, 공동 투쟁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비정규직 연대 실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동지들이 집회 때마다 연대를 해줘 큰 힘이 됐습니다. 3월 말 처음으로 공장 안에서 중식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정규직 동지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관리자들의 침탈을 온몸으로 막아내 줬기 때문에 집회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50~60명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어해 투쟁해 준 것이죠. 이 집회가 끝나고 일주일 만에 스피드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될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를 위해 민주노동  
총과 금속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논의해서 공동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둠화가 진행될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더욱 커지고 노동강도도 더욱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노조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몸으로 때우며 싸우고 있습니다. 법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늘 우리만 잘못했다고 하지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나니까? 산별노조는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투쟁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총과 금속노조가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면서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미FTA의 칼 끝은  
노동자를 겨냥하고 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농민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노동계가 반대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경제부총리 한덕수는 “민주노동총과 한국노총은 빨리 한미FTA 반대를 거둬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들이 한미FTA의 주된 피해자가 아닌 양 사기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로 촉발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의 가격과 질을 악화시켜,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동차·섬유 산업 혜택? 노무현 정부는 특정 산업들이 이익을 본다고 선전해 그 분야 노동자들이 한미FTA 반대 투쟁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 특히 자동차·섬유 분야에서 관세 철폐로 큰 이익을 얻은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로 관세가 떨어져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다고 말하지만, 대미 자동차 수출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기아 자동차는 미국 현지 생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2009년이면 현지 생산 체제가 완성돼 한국에서 자동차 생산은 거의 늘지 않을 것이다. 또, 섬유업체들은 “[얼마 안 되는]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 [이미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한] 공장을 국내로 다시 옮기거나 국산 원사를 쓸 업체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자동차를 비롯한 1백3개 주요 기업 중 91.3퍼센트가 한미FTA로 고용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섬유업체 중 절반

가 없다. IMF 이후 사업장 설립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절반만 인수합병 비율은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올라갔다(산자부 조사). 게다가 보통 인수합병할 때 노동자도 같이 정리해고한다. 그리고 한미FTA에 포함된 ‘이행 의무 부과 금지’ 조항은 고용·단협 승계 의무를 금지하고 있어, 인수합병 때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조차 한미FTA로 인해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시대를 넘어서 ‘일자리’를 파괴하는 성장’(Jobloss growth)의 시대가 됐다”고 인정할 정도다.

소비자 이익의 증대?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로 농산물 등의 값이 싸지고,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 노동자들이 소비자로서 이익을 본다고 사기치고 있다. 물론 몇몇 농산물은 값이 싸질 수도 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쇠고기나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식품(LMO)이 쏟아져 들어와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직이 늘어나 소득이 줄어들면, 설사 일부 상품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우리 삶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 향상’도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한미FTA는 공기업들에게도 “상업적 고려”를 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미 2005년에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는 “상업적 공산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김순자 지부장 인터뷰

“우리를 쓰레기 취급한  
정몽준과 끝까지 싸울 겁니다”

[편집자] 지난해 울산과학대 경비, 식당,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민주노동 울산지역본부 산하 울산지역연대노조에 직가입했다. 울산과학대 이사장 정몽준은 올해 1월 22일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모두 해고했다. ‘국제 여성의 날’ 하루 전인 3월 7일에는 계약해지에 항의해 농성을 하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알몸으로 저항했음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써 끌어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두 달 가까이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최영준 동지가 현대차노조 대의원인 정동석 동지와 함께 김순자 지부장을 만나 울산과학대 투쟁에 대해 들어보

를 하고 있어요. 쯔마들 때문이라며 유인물을 뿌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싸웠어요. 그래서 지하 탈의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2월 15일 졸업식 날에는 밖으로 못나가게 감금하기까지 했어요. 정몽준이 온다길래 뺨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보도조차 하지 않더군요.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항의 농성을 하자, 3월 7일에는 알몸으로 있는 우리를 폭행·성희롱 하며 강제로 끌어내리기까지 했어요. 이제 우리는 천막까지 치고 농성을 하고 있어요. 총학생회는 “민주노동은 물러나라”며 우리를 협박했고, 교수협의회는 학교 눈치보며 [우리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알리고, 투쟁 지지 서명을 받았는데 울산과학대 학생들이 1천 명 넘게 지지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또 지역의 많은 노조와 단체들이 지지 서명과 규탄 집회를 함께해 주었어요. 이런 압력 덕분에 학교측은 지난 4월 18일 교섭에 나왔지만 복직은 2009년이나 가능하라며 우리를 우롱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정몽준을 상대로 원직복직뿐 아니라 직접고용과 폭력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끝까지 싸울 거예요. 지금은 실질적인 연대가 절실해요. 경주 동국대에서도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요구를 하면서 싸웠는데 승리했대요. 경주 동국대의 경우 지역 금속노조가 하루 파업을 하며 1천여 명이 연대투쟁을 해 준 게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싸움이 울산에서 현대 재벌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대리전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민주노동총과 금속노조가 실질적 연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적극 연대만 해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안정은커녕 재앙만 키운 이라크 ‘증파’

오는 5월 1일이면 부시가 이라크 전쟁 주요 전투 종료를 선언한 지 4년이 된다. 4년 전 이 날 부시는 전투기를 타고 항공 모함에 내려 의기양양하게 “임무 완수”를 선언했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듯 지금 이라크는 부시에게 헤어날 수 없는 ‘늪’이 돼 버렸다.

이라크 위기는 미국의 평범한 대중 속에서 광범한 환멸 —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잘 드러났다 — 을 자아냈을 뿐 아니라, 미국 지배계급 내에서도 점령 상황에 대한 커다란 우려 — 이라크스터디그룹(ISG)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잘 드러났다 — 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2월 중순에 시작된 미군 ‘증파’는 이러한 위기에 대한 부시 나름의 대책이었다. 그는 이러한 ‘증파’, 특히 바그다드에서의 병력 증강과 미군 활동 강화를 통해 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증파 간 폭력’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파’ 뒤 두 달이 지났지만 이라크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여러 지표들은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점을 보여 준다.

부시의 주장과 달리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병력 증강이 집중된 바그다드에서는 민간인 사망자 수가 다소 줄었지만 바그다드 밖에서는 사망자 수가 되레 더 늘었다.

새로운 작전 수칙에 따라 민간인 주거지에 배치된 탓에 미군은 저항세력과 훨씬 더 자주 근거리 전투를 치러야 했고, 그 결과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AP>가 수집한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14일 미군 ‘증파’가 시작된 이래 바그다드에서는 그 전 두 달보다 21퍼센트나 많은 미군이 죽었다.

‘증파’가 안정은커녕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이라크와 미국 국내에서 모두 불만이 고조됐다.

미군이 바그다드에 건설하고 있는 ‘분리 장벽’ (증파별 주거지를 상호 차단·분할한다)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바그다드 주민들

미군 ‘증파’ 뒤 한동안 몸을 사리며 잠시 사태를 관망하는 듯했던 사드르 운동(강경파 반미 성직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가 이끄는 운동)은 지난 4월 9일 거의 1백만 명을 동원한 점령 반대 시위로 견제함을 과시했다. 이 시위에서 알 사드르는 이라크 보안군 병사들에게 마흐디군과 싸우지 말고 점령군에 맞서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 사드르 운동 소속 장관 6명과 30여 명의 의원들은 말리키 정부가 미군 철수 시간표를 요구하지 않는 것에 항의해 정부와 의회에서 철수했다.

## 근거리 전투

만약 미군이 사드르 운동과의 정면 대결을 택한다면 사드르가 득세하고 있는 이라크 남부 지역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리 되면 사태는 통제 불능으로 치

달을 수 있다.

이라크 상황 악화에 대한 미국 국내의 불만 고조는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철군법’의 상·하원 통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의 통과를 두고 “민주당이 [중간선거 이후] 부시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사실, 이 법안이 미군 철수를 못박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각종 명목으로 상당 규모의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나마 철군 시한은 구속력이 없다. 부시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멍’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법안의 통과는 대중의 광범한 환멸이 가하는 압력과 함께 이라크 상황 악화와 ‘증파’의 성공 전망에 대한 미국 지배계급 내의 고조되는 불안감을 반영한다. 법안에는 ‘증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목표’와 ‘기준들’(대체로 부시 자신

이 밝힌 ‘기준들’을 다시 못 박고 있는 것이다)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그러한 기준들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점령 정책의 향방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시] 정부의 실수와 무능으로 점철된 이라크 전쟁 4년이 지난 지금”(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더는 부시에게 “백지수표”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부시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이라크에서 치욕스럽게 물러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부시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없고, 아마도 모종의 타협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후퇴를 막고 부시 일당이 이라크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강제하는 일은 여전히 독립적 반전 운동의 몫으로 남아 있다.

김용민

## 이주노동자 공격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지난 2월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은 2003년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 투쟁에 이어 다시금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많은 노동·사회 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월 1백 시간이 넘는 잔업과 철야 노동에 혹사당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측은 산재로 승인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한국주상 지회와 경남지역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앞장서 싸워 올해 2월 산재 승인을 받아냈다.

물론 이러한 중요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는 우리 운동 안에서 여전히 적잖은 논란과 논쟁을 낳곤 한다. 특히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 개별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쟁이 심한 업종들에서 이런 문제가 훨씬 두드러진다. 건설 업

종이 대표적 사례이다.

건설 현장에는 덤프·레미콘·굴삭기 등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만능적인 임금 체불, 다발적인 안전사고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백만 명에 달한다.

## 이간질

이렇게 일자리와 임금이 위태롭고, 노조 조직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설 작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내국인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주범으로 엉뚱하게 몰리기 쉽다.

심지어 같은 건설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의 신고로 이주노동자들이 단속돼 잡혀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결코 국내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나 임금을 위협하는 원

인이 아니다.

자본가들은 늘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되도록이면 적은 임금을 주려 하고, 당연히 낮은 임금으로도 일을 하려는 노동자들을 데려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 불안 등을 감수해야 하는 국내 노동자들의 처지는 그런 상황을 강요하는 사용자들 탓이지, 마찬가지로 (또는 더)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즉, 비난의 화살은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과 정부의 이주노동자 규제와 차별 제도를 향해야 한다.

이 점에서 특정 업종에서 일정한 쿼터(할당량)를 뒤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을 막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운동 내 일부의 ‘현실론’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

쿼터제가 도입되면 이주노동자들은 쿼터 제한 업종이 아닌 낮은 임금의 불법적

일자리를 구하려 들거나 아예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그리 되면 결국 머지않아 기업주들이 다른 국내 노동자들에게도 임금과 노동조건 악화를 강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노동자들이 적대시하고 막아야 할 대상은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핑계로 노동계급 전체를 이간질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이윤 증대만을 추구하는 정부와 자본가들이다.

조기현 대구경북건설노조 위원장은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 이주 노동자를 배치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본은 언제든지 이주노동자를 이용해서 우리를 갈라칠 것입니다.”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공산당 선언》에서 맑스가 설명했듯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는 체제이다.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를, 그래서 생산관계를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는, 그와 함께 사회관계 전체를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 생산의 끊임없는 혁신, 모든 사회 조건의 끊임없는 교란이 … 부르주아의 시대를 다른 모든 시대와 구분짓는 특징이다.”

제1차세계대전 개전 전인 맑스 사후 25~30년 사이에 대다수 지도적 맑스주의 이론가들은 자본주의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알게 됐다. 이 새로운 단계의 자본주의는 맑스가 《자본론》에서 분석한 자본주의와 여러모로 달랐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는 이른바 ‘거대 열강들’(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등)이 거의 세계 전역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단계의 자본주의를 가리키는 말로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널리 쓰였다. 제국주의 분석이 맑스주의의 주요 과제가 됐고, 이 과제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경쟁이 세계 대전 — 당시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충돌 — 이라는 대량 학살로 분출하자 훨씬 더 절박해졌다.

힐퍼딩·카우츠키·룩셈부르크·트로츠키·부하린·레닌 등 당대의 많은 지도적 맑스주의자들이 이 과제에 뛰어 들었다. 힐퍼딩의 《금융자본》(1910년), 룩셈부르크의 《자본 축적》(1915년),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 경제》(1916년)가 제국주의 논쟁에서 특히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단연 가장 영향력 있는 분석으로 입증된 것은 레닌의 소책자 《제국주의 —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1916년)였다.

레닌의 소책자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었다. 레닌 자신도 이 소책자가 제국주의라는 주제를 다룬 “대중적 개설서”일 뿐이라고 설명했고, 짜르 정권의 검열을 통과해야 했으므로 제국주의의 경제적 특징들만을 다루고 정치적 결론 도출은 되도록 자제했다. 그럼에도 이 소책자는 제국주의의 핵심 특징과 구조,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레닌의 정치적·이론적 토대를 놀라우리만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다.

### 세계 대전

레닌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일반의 근본적 특징의 발전이자 그 직접적 연장”이라고 보면서도, 제국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1. 자본의 독점이 자본주의적 자유 경쟁을 대체하고, 거대 독점기업·카르텔·트러스트 등이 경제 생활을 지배한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희생된 ‘군복 입은 프롤레타리아’ — “자본주의의 명에서 인류를 해방시킬 구원자들이 무덤 속으로 쏠려 들어간다” (로자 룩셈부르크)

2.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이 융합해 ‘금융자본’이 되고, 금융 과두가 출현한다.

3. 상품 수출(그 전 단계 자본주의의 전형적 특징이었던)이 자본 수출로 바뀌고, 특히 자본 부족과 값싼 노동력·토지·원료 때문에 이윤율이 높은 경제적 후진국들로 자본이 수출된다.

4. 국제 독점 자본들이 형성돼, 세계 전역에서 영업하며 자기들끼리 세계를 분할한다.

5. 이런 경제적 분할과 함께, 거대 열강들 사이의 세계 영토 분할도 완료된다. 따라서 또 다른 확장, 또 다른 식민지 병합은 오직 강압적 세계 재분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레닌의 분석은 분명히 제1차세계대전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일 뿐 아니라, 그의 혁명적 반전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전쟁이 제국주의의 필연적 결과이고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근 단계이므로,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는 모두 새로운 전쟁 전의 일시적 ‘휴전’일 뿐이다. 진정한 평화는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전복해야만 찾아올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할 때마다 레닌은 자신과 카우츠키의 차이를 열심히 강조했다. 당시 카우츠키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맑스주의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카우츠키가 1914년 8월 제1차세계대전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닌은 그를 배신자로 보았다.

카우츠키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이런저런 ‘단계’나 심지어 자본주의 자체의 경제적 필연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국주의가 각별히 친제국주의적인 자본가들의 영향력 아래 채택된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본주의가 머지않아 ‘초(超)제국주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아니 거의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제국주의’ 단계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독점 기업들끼리,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충돌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합의·협력하게 될 것이라 했다.

레닌은 그런 견해가 제국주의의 정치와 그 경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본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이 없는 비(非)제국주의적이고 평화로운 자본주의가 가능하다는 환상을 부추겨, 전쟁·제국주의·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무디게 만들고 기회주의·개량주의·계급협력 노선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재앙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경제적 분석은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에 대한 그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맥락 속에서도 봐야 한다. 그가 처음에 이런 입장을 발전시킨 것은 짜르 제국 내의 많은 피억압 민족들 — 라트비아인·그루지야인·우크라이나인 등 — 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과였다. 레닌은 억압국인 러시아의 혁명가들이 피억압 민족들이 원한다면 분리할 권리도 옹호해야 할 절대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레

닌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만 노동계급이 국제적으로 단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입장을 식민지 일반으로 확대·적용해서, 제국주의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중국까지 반제국주의 투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투쟁들이 제국주의 열강을 약화시키고 노동계급의 제국주의 열강 전복을 돕는 결정적 구실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의 피억압 민족들·국민들과 노동계급 사이의 국제적 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물론 독자적인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 과잉 확장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출간된 지 91년이 흐르는 동안 세계 자본주의는 경제적·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 — 1930년대의 대공황,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의 성장(과 몰락), 제2차세계대전, 냉전, 상시 군비 경제와 전후 호황, 식민주의의 퇴조, 1970년대 경제 위기의 재발, 세계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변화 — 를 겪었다. 때때로 레닌의 분석에서 어떤 요소들, 즉 저개발국들로의 자본 수출 같은 요소들은 현실 관련성이 떨어진 반면, 다른 맑스주의자들이 강조한 요소들, 예컨대 부하린이 지적한 국가와 자본의 결합은 현실 관련성이 더 커졌다. 그럼에도 레닌이 분석한 핵심들이 시간의 시험대를 아주 잘 통과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대부분 오늘날의 세계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거대 자본주의 기업들(물론 레닌 당시보다 훨씬 더 큰)과 제국주의 국가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그들이 옛 소련 붕괴 뒤 ‘새로운 세계 질서’의 평화가 찾아왔다거나 ‘역사의 종말’이 도래해 충돌이 끝났다거나 자본주의 세계화 덕분에 빈곤과 전쟁이 사라졌다고 환상을 퍼뜨렸음에도, 제국주의는 여전히 호전적이고 반제국주의 반란도 성장하고 있다. 미국이 유일 제국주의 초강대국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 미국이라는 열강은 중국이나 부활하는 러시아 같은 미래의 잠재적 위협들에 맞서 나름대로 전략을 짜야만 하고,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과잉 확장해 있다. 그리고 물론 우리편을 보면,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비타협적 반대가 사회주의 정치의 절대적 핵심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 다함께의 기본 입장

###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기아차

## 비정규직 해고 반대 파업에 승리를!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에 밀려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기아 사측은 올해 초부터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요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계약해지, 단협파기, 식당 노동자 잔업특근 통제, 고소고발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야말로 노조 탄압에서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죄다 보여 주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와 정규직 활동가들은 적극적인 공동 투쟁으로 탄압을 막아내고 있다. 18대 전임 집행부와 달리 신임 19대 집행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 자본은 더러운 탄압의 칼을 거두지 않고 있다. 최근 PG주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25명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고 KD부품사업부 노동자 1백30명에게 분사를 통보했다. 이는 단체협약과 고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사회 저지 집회

용보장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다.

나아가 ‘부품 반출’을 빌미로 정규직 노동자 15명에게도 해고를 통보했다. 회장 정몽구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기아 사측이 노동자들의 관행적인 ‘부품 반출’을 빌미로 해고 통보한 것은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이에 맞서 PG 공장의 비정규직 노

### 현대차

## 노동강도 강화와 대량해고에 맞서 단결 투쟁하자

지금 현대자동차 4공장 소형버스부는 스탠텍스 후속 TQ(신종 차량) 생산을 빌미로 3백여 명 인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량 생산의 약 40퍼센트를 외주로 돌리려 하고 있다.

회사 측의 인원 감축 계획에는 일부 정규직 조합원과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 감축 대상이 아닌 정규직 조합원도 노동강도 강화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전체 노동자들을 공격하려는 수작이다.

지금 4공장 소형버스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보장과 노동강도 완화”를 요구하며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보장과 노동강도 완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나는 4공장 대의원으로서 ‘노동강도 완화와 인원 감축 반대’를 위한 대

책위’를 구성해서 함께 투쟁할 것을 4공장 대의원회와 현대차노조 정규직 지부에 적극 제기하고 있다.

5월 7일 현대차 정규직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지도부는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함께 연대 투쟁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서 싸운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4공장 대의원)

### 독자편지

##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체어맨

최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월간 중앙» 5월호 인터뷰에서 “노총 위원장은 대통령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된다”며 고급 승용차 체어맨을 타고 다니는 것을 자랑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 노조 간부들이 그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고 말했다.

노조 상층 간부들은 체어맨을 타고 다닐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이 발언은 최근 그의 행보와 부합하는 듯하다.

이용득 위원장은 경총 회장과 함께 뉴욕 월가에 가서 투쟁 안 할 테니 투자해 달라고 읍소해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몽개 버린 적이 있다. 한국노총

의 ‘노동절’ 마라톤대회는 경총·〈조선일보〉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게다가 한국노총은 연말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을 배제하고 ‘당선 가능한’ 후보를 공식 지지하기로 했다. 조합원 총투표 절차는 기성 보수 정당들 유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한국노총 김성태 부위원장은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출범식에 가서 “친노동자 후보와 정책 연합을 하고 집권 중에도 도울 것”을 약속했다.

정부 예산과 경총의 돈을 받아 만들려는 노사발전재단도 이용득 위원장의 ‘업적’이다. 노사발전재단은 직원의 무려 70퍼센트 이상이 비정규직

인데 최근에 17명을 해고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는 “이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보기 좋다. 바로 이런 것이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용득 위원장에게 “최근 민주노총의 행보가 저희와 부합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을 민주노총 지도부는 모욕으로 생각해야 한다.

김문성(금융노조 KB국민지부 정책홍보부장)

### 바로잡습니다

〈빛들〉 41호 10면 독자편지 ‘국민연금 ...’의 필자는 김태연이 아니라 김태현입니다.

###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 정기구독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증원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입금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 부당한 출교에 맞선 불굴의 투쟁 현장을 가다

[편집자] 지난해 4월 19일 고려대 학교 당국은 통합된 보건대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에 반대해 농성을 벌인 학생들 중 7명에게 입학 기록까지 말소하는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당한 학생들은 삼성 회장 이건희 철학박사 학위 수여 반대 시위 등 대학 내 진보적 운동에 앞장섰던 바로 그 학생들이었다. <맞불> 기자 승주가 출교 철회 농성 천막에서 이들을 보내며 1년을 넘긴 출교 학생들의 꾀꿀한 투쟁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한다.

‘고려대학교 본관 앞 출교 철회 농성 천막’. 1년 전 4월 19일 사상 초유의 출교 조처를 받고 학교에서 내쫓긴 학생들은 이제 이곳을 정식 주소지처럼 말한다.

천막을 방문한 4월 26일, 천막 안쪽은 시간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컴컴했다. 출교 학생들의 빼앗긴 1년도 이곳에 멈춰 있는 듯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간 입구에는 ‘3분카레’ 수습 개가 쌓여 있었다. 선반의 약상자에는 늘 잔병치레를 하는 출교자들이 먹는 약과 영양제가 가득했다.

겨울을 나는 동안 천막을 둘러 친 비닐 때문에, 천막 안은 아침부터 더운 공기로 숨이 막혔다. 바깥의 잔디 깎는 소음과 진동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진이 빠졌다.

“야, 30도야 30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다녀온 출교생 주병준 씨가 온풍기에 표시된 실내기온을 가리켰다.

병준 씨는 허리디스크 때문에 앉은 채로 다리를 쭉 펴지 못했다.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 신경이 눌려서 되게 아파요.”

출교생들이 대화를 요구하며 본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하자 학교 측은 본관 정문을 걸어 잠가버렸고, 1년이 넘는 오늘까지도 그 문은 굳게 닫혀 있다.

학교 측은 이날 저녁 개최 예정이던 ‘삼성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토론회도 “출교 관련한 건 안 된다”며 장소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토론회는 차가운 복도에서 진행됐다.

## 천막

토론회가 끝난 뒤 천막에서 출교생 김지윤 씨를 만났다. 지윤 씨는 과자로 허기를 달래며 ‘집밥’이 그림다고 말했다. “엄마는 미역국에 조기를 구워서 생일상을 차려 주셨어요. 몇 년간 똑같은 메뉴로. 그게 너무 먹고 싶어요.”

지윤 씨는 무릎 연골이 파열돼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 전에는 걷지 말라는 의사의 주의를 받고 주로 학교 근처 임시 숙소에서 머물며 외출도 삼가고 있다. 임시 숙소로 돌아가는 지윤 씨와 동행했다.

“천막에서 빠진 지 오늘 5일째예요. 원래 한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였는데, 천막에서는 계속 새벽에 깬어요. 다리도 맨날 붓고 아파서 왜 그럴까 했는데, 천막에 경사가 좀 있어요. 피가 다리로 쏠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고시원 같은 건물 한쪽에 있는 지윤 씨 임시 숙소에서 들어가자, 우체국 택배 박스가 잔뜩 보였다. 스카프를 포장·배송하는 아르바이트란다. 집에만 있게 된 뒤로 시작했다고 한다.

밥은 챙겨먹는지 묻자, 집에만 있으니 배고픈지도 모른다고 하며 닳새 간의 끼니를 씹해 본다. “이 앞에서 삼각김밥 사 먹고 그제는 저녁 한 끼만 먹었고...”

몸이 성할 리 없다. “출교생들은 다 위염에 걸렸어요. 병준 씨는 여름에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해서 엄청 고생했어요. 지지 물품 들어오는 게 다 초코파이랑 컵라면이라 맨날 그거만 먹었어요. 요즘엔 3분카레가

주식이고, 질려서 중국음식 시켜 먹는데 그것도 조미료 덩어리잖아요.”

“영만 씨는 전기장판에서 자면 땀이 계속 차고 식생활도 엉망이라 그런지 허벅지에 종기가 났는데 엄청 컸나 봐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나고 덧나고, 겨울인데도 바지를 입고만 겨우 견뎌요. 병원에 가서 그걸 째는데 영만 씨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너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안 왔느냐고 막 화났어요.”

조정식 씨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에 구멍이 뚫리는 병에 걸리기도 했고, 안형우 씨와 서범진 씨도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

지윤 씨는 5월 15일부터 정밀검사를 받고 수술 일정을 잡는다. 수술 후에도 몇 주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니, 앞으로 적어도 한 달은 거의 걷지 못할 판이다.

“답답하죠. 쉬는 것도 하루일 때 좋은 거지. 어제는 누가 도서관으로 막 뛰어가는 걸 봤는데,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졸업식 날, 출교 이후에 신경 많이 써준 고마운 친구 하나가 졸업하는 걸 보니까 재량 나랑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새터 때도 서울에 같이 기차 타고 왔는데 재는 졸업하고 난 여기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졸업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교생들은 비판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들 출교자들이 천막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있을 줄 아는데 와서 보면 너무 밝아서 놀래요. 천막에 있는 거 자체는 힘든 일이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요.”

“얼마 전 전교조 집회 때 모금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굳건히 투쟁하고 있는 고대 출교자들

지 문자가 왔어요. 입학식이나 수시모집일에 유인물 뿌리면 다음날까지 문자가 와요. ‘오늘 문자 스무 개 왔어’ 하고 부모님께도 자랑하면 ‘아직도 너희를 안 잊고 있구나’ 하고 좋아하세요.”

“그럴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 투쟁이 단지 작은 학내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느껴요. 요새는 새내기들도 같이하는데 그런 활기가 좋아요. 학교는 새로운 지지자들이 늘어나는 게 엄청 싫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지금 재정이 너무 부족해요. 당장 제 수술만 해도 입원비 합하면 1백50만원

이상 들 거예요.”

지윤 씨와 대화가 끝나고 새벽 세 시가 다 돼 돌아온 천막의 앞은 비닐벽은 찬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4월 하순인데도 공기가 워낙 싸늘해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전기장판에 자리를 잡고 어지러운 이불 틈으로 파고들었지만, 불편한 잠자리에 적응이 되지 않았다. 이 춥고 불편한 곳에서 매일 밤을 보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투나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출교생들이 건강을 되찾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출교생 김지윤 씨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모금**  
하나은행 391-910195-67507 (강영만)

**출교 학생들에게 지지와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세요**

강영만 011-9090-7366 / 김지윤 016-546-5560 / 서범진 010-7765-1917 / 안형우 016-510-0581 / 조정식 011-9560-3357 / 주병준 011-9909-0249

**‘고려대출교생후원회’ 회원 모집**

‘고려대출교생후원회’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 정기적인 CMS 후원 모금 / 따뜻한 음식, 난방기구 등 농성에 필요한 물품 마련 / 이메일과 뉴스레터 등으로 출교생 소식 전달 / 각종 후원 행사

문의 : 민주혜(011-9636-4926), 오민애(011-9909-3893)  
<http://blog.naver.com/supportkustu>

## 지역사회포럼

부산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5월 4일(금) 오후 8시

연사: 이정규(경상대 경제학과 강사)

장소: 토즈(서면 마리포사 4층)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552-7696

인천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5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연사: 김용욱(주간 <맞불> 기자)

장소: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4층

교육실

문의: 010-3083-5508

서울 동부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인가?**

5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연사: 이정규(경상대 경제학과 강사)

장소: 동부여성플라자 2층 세미나

실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330-4624

청소년다함께포럼

**3불정책을 넘어 입시 폐지로**

5월 12일(토) 오후 3시

연사: 이항빈(이화여고 교사)

장소: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미지(영

동역 10번 출구)

문의: 016-463-4844

## 주간<맞불> 12면 증면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이 성공했습니다!

4월 30일 현재 <맞불> 증면을 위한 모금액이 5천36만 1천 원입니다.

모금의 성공은 주간 <맞불>이 이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기여하고 주도하기를 바라는 모든 동지들의 성과입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나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조건에서 모금에 참여 준 동지들의 소중한 기여를 잊지 않겠습니다.

모금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목표가 달성됐어도 여전히 모금을 약속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간 <맞불>을 위한 후원은 계속됩니다.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017002-04-078931(백은진)





# 비정규직 확대와 공격을 저지하라



전지윤

올해 7월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기업주들은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다.

경총은 기업주들에게 <비정규직 인력 관리 체크 포인트>라는 악랄한 착취 지침까지 내렸다. 이 지침은 '기간제 2년 뒤에도 정규직화하지 않는 방법, 파견제 고용을 늘리는 방법, 분리직군화로 비정규직 차별을 영구화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런 지침에 따라 병원·학교·공공기관·제조업 작업장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외주화·분리직군화라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늘 그랬듯이 공공기관이 이런 공격의 선봉에 서 있다. 철도공사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2천8백6명 중 8백68명을 해고하고 1천9백38명을 분리직군화하겠다고 나섰다. 광주시청은 노조를 건설한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들을 무더기 해고했다. GM대우·현대차·기아차에서도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업주들의 이러한 공격

에 날개를 달아 주려고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16개 직종은 2년이 지나도 '정규직화'될 수 없다. 물론 나머지 직종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면 그만이다. 파견 대상 직종도 50여 개나 늘렸고, 제조업에서도 합법 파견이 가능하다. 비정규직 확대·양산 악법에 생색내기로 담겨 있던 '비정규직 보호'의 무늬마저 없애려는 것이다.

## 분리직군화

정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인사관리 표준안>도 하달했다. 이를 보면 '우리은행 식 무기계약직과 분리직군화'가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여기서 정부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며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분리직군화'는 임금 차별을 고착화하고, 정규직과 비교한 차별 시비를 차단하려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을 요구해 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권리도 억압하고 있다. '준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노동 1.5권만 주겠다는 것이다.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캐디 정도는 근로자로 인정하겠지만 화물연대나 보험설계사는 안 될 것 같다"며 이간질까지 하고 있다. 나아가 6월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입법을 논의하겠다고던 약속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공격과 기만에 맞서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저항도 벌어지고 있다. 기륭전자, 하이닉스매그나칩, KTX 등에서 수백 명이 넘는 영웅적 장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울산과학대와 광주시청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들은 '알몸 시위'까지 하며 처절하게 저항했다.

고려대병원 비정규직, GM대우 부평공장 하청노동자 등은 단호한 저항과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 속에 해고 철회를 쟁취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노총 이석행 지도부가 비정규직 활동가들과 논의도 없이 노사정협의회에 참여해서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손질하는 데 매달린 것은 정말 유감이다. 전국비

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지적처럼 "비정규법안은 폐기의 대상이지 수정의 대상이 아[닌]"데 말이다.

최근 노사관계 학자들인 진숙경·김동원은 18개 비정규직 노조의 사례를 분석한 "비정규직노조의 유형별 실태와 시사점"(<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2007년)을 발표했다. 이 논문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공동운명체적인 관계[다.] ... [비정규직이 확산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정규직이 줄어들게 되[며, 반면] ...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장기적으로 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켜준다. 따라서] ... 연대와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 모두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또, "정규직 노조의 협조와 지원이 비정규직노조의 성공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올해 비정규직 공격을 막아낸 곳은 모두 정규직이 연대한 곳이다.

현장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공격을 외면하거나 연대 투쟁의 의무를 회피하는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강력한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 ‘파업과 정치 투쟁 증가’가 필요하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하며 "크고 작은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지뢰밭이 널려 있"는 반면 "이것을 조율할 기제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2006년 노사관계 평가와 2007년 전망", <노동리뷰>, 2007년 1월호)

또 "금속 산별노조의 등장은 그 전투성과 파괴력을 감안해 보았을 때 사용자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사건"이라고 걱정했다.

올해 초 현대차 성급급 투쟁,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연대 파업 등이 그 가능성을 보여 줬지만 저들의 우려와 걱정은 충

분히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금속노조 지도부의 보수적 태도가 그 이유 중 하나다.

민주노총 이석행 지도부는 투쟁 건설보다 교섭 복원에 더 치중하고 있다. "파업을 자제하고 어떤 경우라도 대화하겠다"는 이석행 지도부의 태도는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민주노총의 탁월한 리더십"을 칭찬했고, 경총 회장 이수영은 "국민경제에 좋은 사인을 보낸 것 같다"며 좋아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령, 노사관계로 드맵 시행령, 특수고용직 입법 등에서 정

부와 기업주들은 노사정협의회에 들어간 민주노총 지도부의 뒤통수만 치고 있다. 따라서 이석행 지도부가 진행중인 '현장 대장정'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금속노조 정갑득 지도부도 투쟁 건설보다 '산별교섭 성사' 자체에 더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대기업주들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요구 수준을 낮추고 있다. 그래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장기투쟁 사업장 해결,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의 주요 요구는 중앙교섭 요구안에 없다. 기업주들에게 교섭을 강제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데 말이다.

금속노조 남택규 수석부위원장은 사전

논의도 없이 부적절한 조건으로 하이닉스매그나칩 노동자들의 처절한 장기 투쟁을 끝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노동자들은 "목숨 같은 노조 깃발을 내리고 개 값을 받으란 말이나"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투쟁과 연대 건설보다 중재자 구실을 하며 교섭에 치중하는 것은 문제다.

경총은 '2007년 노사관계 전망'에서 "파업과 정치 투쟁 증가"를 "산별노조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이런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그 점에서 금속노조의 좌파 대의원들이 지도부에게 한미FTA 반대 총파업 결의를 강제해 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